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국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 2.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2
III.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	7
IV.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전략체계	9
V.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주요 추진과제	10
VI. 추진체계	20
VII. 기대효과	22
VIII. 추진일정	23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패러다임 변화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
-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성장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

< 국정과제 >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8.5. 정부 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 행정 구현

8.5.1.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체계 구축

8.5.4.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혁신창업 지원

8.5.5.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공동자산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되고, 국민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 조건
-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혁신성장의 기반으로서 공공데이터의 가치 부상

-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며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 기능

II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

□ (기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3.10)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13.12) 및 운영

□ (개방) 국가 중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 공공데이터법 시행 4년 만에 데이터 개방이 4.7배 증가*하였고,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48개 분야) 전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¹³⁾ 5,272개 ⇨ ⁽¹⁷⁾ 24,588개, 4.7배 증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¹⁵⁾ 11개 분야 ⇨ ⁽¹⁶⁾ 33개 분야 ⇨ ⁽¹⁷⁾ 48개 분야

□ (활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앱 서비스 확산 등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¹³⁾ 42개 ⇨ ⁽¹⁷⁾ 1,421개, 대표서비스 : 김기사, 굿닥 등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¹³⁾ 13,923건 ⇨ ⁽¹⁷⁾ 3,871,984건, 278배 증가

□ (국제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 확보

- 범정부적 노력으로 단기간에 OECD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 제고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의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 ODB)에서 5대 강국 진입

공공데이터정책 대표적 추진성과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1위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 Data Index) 개요

- (도입배경) OECD 회원국('16년 31개국)의 데이터 개방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픈데이터헌장('13년, G8 정상회의 의결)을 기초로 평가지수 개발
- (평가내용)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3개 분야로 평가(격년 주기)
- (발표) 정부백서(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수록 및 홈페이지 게재

□ 평가결과 ('17. 7. 13. 발표)

- (총괄) 31개국 중 대한민국 1위 (1점 만점에 0.94점)
* 2위 프랑스, 3위 일본, 4위 영국, 5위 멕시코, 6위 스페인, 7위 캐나다, 12위 미국
- (가용성)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표준 가이드라인 보유
- (접근성) 공공데이터포털 중심으로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 개방
- (정부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 (진단결과) 평가 관련 의견

< 총평 >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Country Fact Sheet(Korea) 발췌

- ▶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개방 분야에서 OECD 리더국가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을 평가하는 OUR data Index에서 1위로 평가됨

Korea is a leader among OECD countries in the implement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strategies

Governments gather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as part of its administrative duties. Some of that information can be put to use not only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itself, but also to create value-added in private sector, foster innovation and empower citizens' decision-making. Korea scores the highest on the OECD *OURdata* index, a measure of data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the government support for re-use of data.

2. 공공데이터 정책의 한계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로 아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

구 분	한 국	영 국	프 랑 스
개방 공공데이터	24,588개	43,471개	33,306개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17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공공데이터를 국민 자산이 아닌 특정기관 자산으로 인식

- 공공데이터는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나, 그간 특정기관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되고 소극적으로 개방

※ 법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별적 개방

- 특히, 공급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소재 파악에 한계

※ 국가 전체 혹은 각급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고, 어떤 데이터와 연결 되는지 등 데이터 소재 파악 및 확보 제한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만 집중, 사회적 가치 고려 미흡

- 공공데이터 활용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되어 데이터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계

- 사회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추진체계 부재

□ 정부 주도의 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데이터 협치 부재

-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식 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참여나 민간과의 협치를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미흡

- 데이터의 공공 간, 공공·민간 간 연계 시 더 나은 공공·민간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나, 칸막이 존재로 데이터가 흐르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공공 간, 공공·민간 간 데이터 융합이 용이한 구조로 생산·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 및 융합 시 애로 발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시급
 - 개인정보 보호 중심 규제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조

<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구분	한국 (전체 24,588개)	미국 (전체 228,387개)	영국 (전체 43,471개)
인공지능 데이터	68개(0.3%)	9,447개(4.1%)	278개(0.7%)
공간·위치 데이터	8,380개(34.1%)	149,389개(65.4%)	24,266개(55.8%)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데이터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17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데이터의 정확성 결여와 데이터 구조 미흡 등 데이터 불일치 및 중복·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
 - ※ 국가 중점 개방데이터 중 원천데이터 간 기준 미비로 인한 불일치 등 문제 발생, (예) 농축수산물 경락 조사가격 DB와 도매시장 DB 간 구조 불일치로 가격데이터 누락

□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전문 인력 부족

- 정부 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가 부재
 -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데이터 활용 관련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한국행정연구원, '16)
- 공공데이터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

< 공공데이터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 제공받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모름 · 원형데이터로 개방되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 활용하기 어려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양적, 질적 부족 ·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과 절차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활용 어려움
데이터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데이터 표준이 부족하여 데이터 융합시 예로 발생 ·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자유로운 데이터 가공 및 활용이 어려움
국제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양적 개방 및 정책 등 정부의 의지는 좋으나 국민참여 기반 부족 (OECD)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미비 (ODB)

참고 각국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 **미국 : 데이터 공개 정책(Open Data Policy) 패러다임 전환('16.2.6.)**
 - 개방 중심의 오바마 정부 “오픈 데이터 정책”에 대한 성과 점검 후, 데이터의 지식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 정책방향 전환
 - 정부·기업·시민단체·학계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공적인 가치 창출하는 “데이터 협업 프로젝트*” 추진
 - *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공개하고 관계전문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제공, 협업사례 소개 등
 - 참여 기반의 새로운 오픈 데이터 플랫폼*(opportunity.census.gov) 공개
 - * 미국 연방 정부 행정관리에산국,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직장·주택·교통·학교 및 인근 공공시설 등의 커뮤니티 정보 제공

- **영국 :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보고서” 등 발표**
 - '12년 발표한 “정부 디지털 전략”을 보완하여 “정부 혁신 (Transformation) 전략('17~'20)*” 발표
 - *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부 공공서비스·업무 프로세스·거버넌스 등 정부혁신 및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을 위한 전략 제시
 -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를 조사·연구 목적 하에 익명화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경제 법안('17)” 법제화

- **일본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발표('17.5.30.)**
 - 공공데이터의 디지털 활용을 통한 디지털 사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정 및 시행('16.12.14.)
 - * 관민데이터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사무·사업을 수행 하면서 관리·이용·제공되는 전자데이터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관민데이터 활용 사회” 모델 구축을 위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수립('17.5.30.)
 -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시책의 기본방침, 행정기관의 관민데이터 활용 사항, 지자체·기업의 관민데이터 활용 촉진, 기타 정부의 중점시책 등 규정

Ⅲ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

- ①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제고
- ② 데이터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 ③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데이터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고,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④ 공공·민간 內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스마트행정 구현

	종전에는 (As-is)	앞으로는 (To-be)
(기본인식)	√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전유물	√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자산
(개방방식)	√ 선택적 개방	√ 개인정보 등 제외 원칙적 개방
(구현가치)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행정추진)	√ 직관·경험에 의한 행정	√ 데이터·증거에 의한 행정
(추진체계)	√ 정부 주도	√ 민관 협치

< '18년 국민 삶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

①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검색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맵'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고,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

② 국민의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1번가'를 통하여 간편하게 요청하고, 쉽게 확보 가능

③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환경·안전·의료데이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관련 민간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윤택하게 변화

< '18년 개방 예정 주요 공공데이터 >

분 야	데이터명	기대효과
의 료	인공지능 의료정보	익명화된 의료영상 데이터 개방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정확도 높은 민간 분석 서비스 창출로 국민 건강의 획기적 증진 ※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內 제한 개방
환 경	먹는샘물 수질정보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 개방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 제고, 국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보장
안 전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도로·터널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 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관련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④ 공공부분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CCTV 사각지대 분석·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일괄 제공
 -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급차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조기에 인지
 - CCTV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 제고

IV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전략체계

전략 목표

“데이터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혁신이 창출되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①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 ②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③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①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 ② 공공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 운영
- ③ 국민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①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②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③ 공공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①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②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 ③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추진 기반

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② 데이터 전문 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③ 데이터 연구개발 확대
및 예산 통합관리

1.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 ◇ 공공데이터가 많이 개방되고 있으나, 민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지 않고, 개방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품질 수준이 낮음(국민·기업)

①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 (전수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698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목표설정) 각계 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방을 원칙으로 비공개 대상 데이터를 제외한 중·장기 데이터 개방목표 설정
- (평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수준·품질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하여 데이터 개방 선순환 체계 구축
 - ※ ① 정부혁신 평가지표 內 공공데이터 개방 지표를 반영하여 실질적 데이터 개방 강화
 - ②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등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구축

②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개방)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목표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정된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 방식에서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국민에게 개방(원형데이터 형태)
 - 국민 수요가 많거나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우선 개방
 -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¹⁷⁾ 48개 → ⁽¹⁸⁾ 64개 → ⁽¹⁹⁾ 80개 → ⁽²⁰⁾ 96개 → ⁽²¹⁾ 112개 → ⁽²²⁾ 128개 분야
 - 민간에서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18년 개방 예정 주요 공공데이터 >

분야	데이터명	개방내용 및 기대효과
의료	의료영상 정보	익명화된 의료영상 데이터 개방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정확도 높은 민간 분석 서비스 창출로 국민 건강의 획기적 증진 ※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內 제한 개방
환경	먹는샘물 수질정보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 개방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 제고, 국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보장
안전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도로·터널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 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관련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③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개방표준)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고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 부담 해소
 -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누적) : ⁽¹⁶⁾ 79종 → ⁽¹⁷⁾ 109종 → ⁽¹⁸⁾ 120종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비중** 지속 확대
 - * 오픈포맷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율 : ⁽¹⁶⁾ 69.4% → ⁽¹⁷⁾ 78.8% → ⁽¹⁸⁾ 80%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전 기관 확대·시행
 -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 : ⁽¹⁸⁾ 중앙행정기관 → ⁽¹⁹⁾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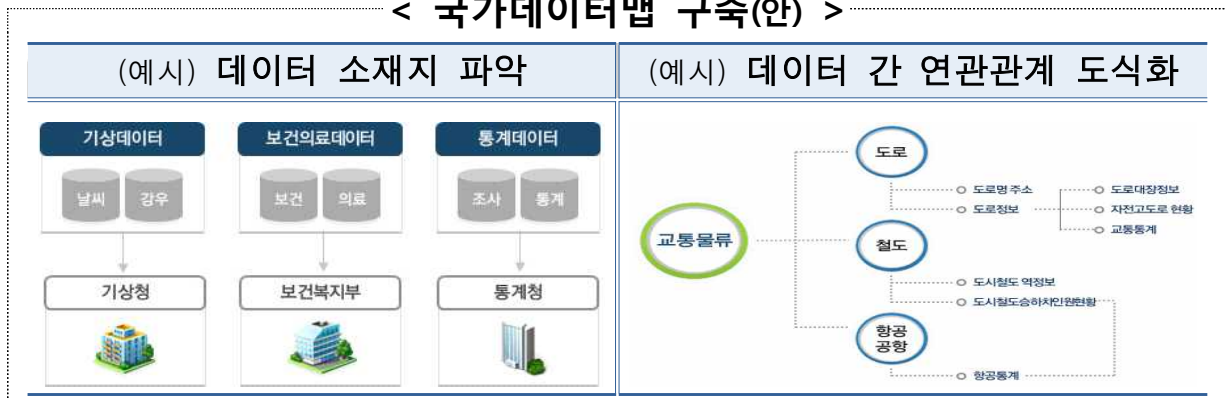
2.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제공받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국민)

①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맵)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소재지 파악 정보 제공
 - * 공공데이터포털 內 뿐만 아니라, 민간 검색엔진에서도 데이터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연관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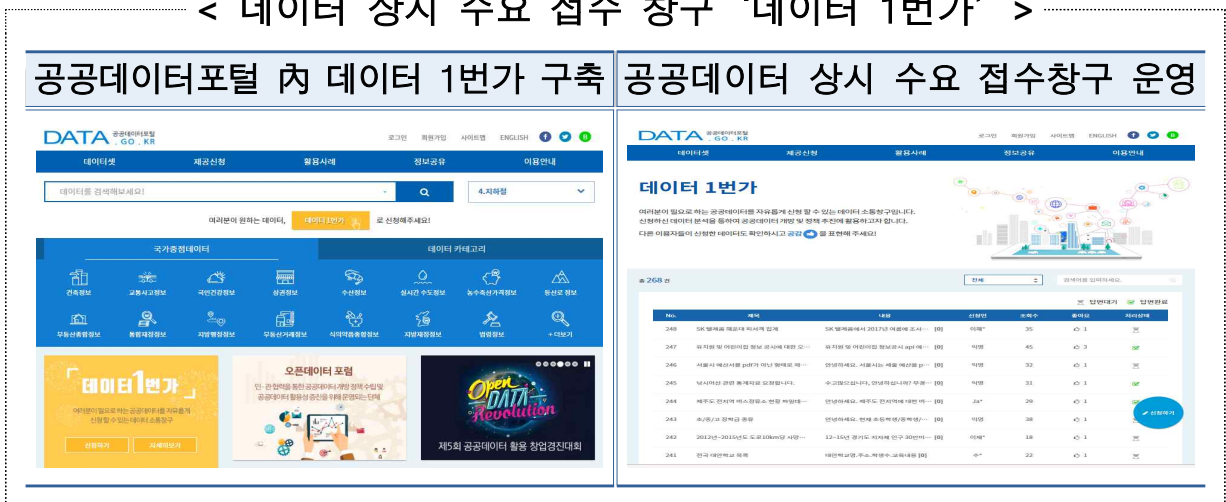
< 국가데이터맵 구축(안) >



② 공공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운영

- (데이터 1번가) 데이터포털(Data.go.kr) 內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개방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 답변을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답변기간 : (기존) 10일 → (개선) 3일 이내
 - * (데이터 1번가) 공공데이터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게 개방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수요 요청에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소통 창구('17년 8월~ 시범운영 중)

< 데이터 상시 수요 접수 창구 '데이터 1번가' >



③ 국민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데이터 활용 기반) 일반국민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데이터 가공·분석·시각화 등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원형 데이터 개방 확대와 함께 데이터를 시각화·통계화 등 가공하여 개방
 - 국민 개개인이 직접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Tool Kit)' 개발 지원
 - * 미국 공공데이터포털(Data.gov)에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상데이터·교통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도구(Tool Kit)를 제공
- (데이터 프리존) 분야별·지역별 국민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활용 해볼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Free Zone)*' 확대 설치·운영
 - * 국민·기업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 분야별(금융·통신·통계·보건 등)·지역별 특화된 데이터 프리존 확대

3.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국민이 국정 의 순 과정에 참여하여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국민)

1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발굴·개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수요조사·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
 - 발굴된 데이터는 신규 구축·범주화 등을 통해 대국민 개방
 - * (예시) 환경 분야 데이터, 복지 분야 데이터, 지역사회 분야 데이터 등
- (활용) 사회적 가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 * (예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 안전·복지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보급
 -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계획(누적) : ^(16년) 6종 → ^(17년) 16종 → ^(18년) 26종
 - 국민 관심도가 높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전국 보급·확산*
 - * 전국 확산모델(3종) : 빅데이터 분석으로 ①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도출 및 우선배치 지역 선정, ② CCTV 사각지대 도출 및 추가 설치 필요 지역 선정, ③ 국민 생활 불편(민원) 조기 인지

< 사회적 가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

- ◆ (환경) 환경영향평가정보(최근 10년간), 대기배출오염정보를 DB화하여 개방
 - ⇒ 그래프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 ◆ (장애인) 장애인 등록연금장애수당 등 지원정보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제공
 -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활용
- ◆ (지역사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관련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 ⇒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전국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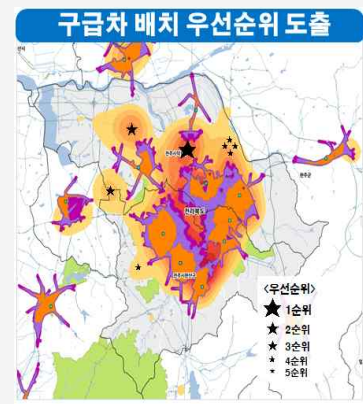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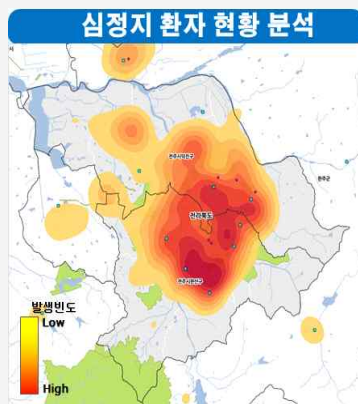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구급차 배치·운영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개요

- (목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관 수요가 높은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표준화하여 유사모델 개발 최소화 및 예산 절감
- (구축) 고용·복지·교통·안전 등 총 16종의 표준분석모델 구축('16~'17)
- (분석) 62개 공공기관에서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하여 125건의 분석 실시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창출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구급차 배치·운영 모델 전국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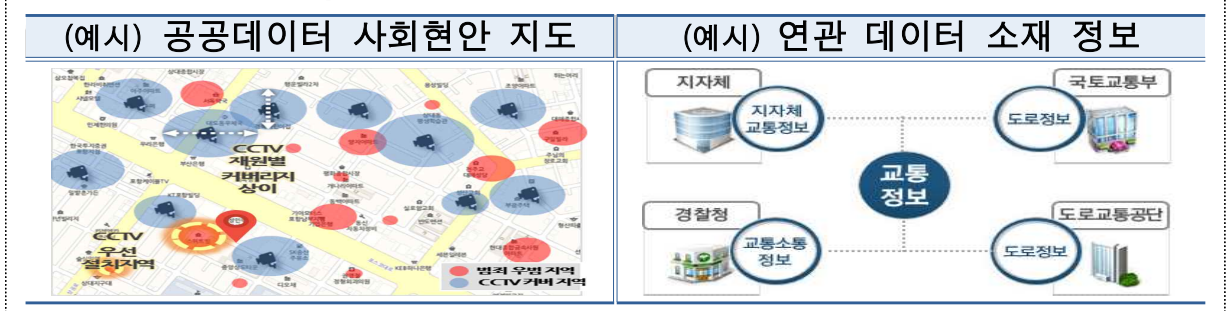
- (목적)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급자원의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하고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분석)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인구데이터의 융합·분석으로 지역별·시간대별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구급차 배치·운영,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
- (효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소방·안전 분야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 (확산) '18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제주·서귀포 포함)에 확산 적용



②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사회현안지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 (예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고,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해 지도를 보완·완성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정보 제공
- 국민 누구나 사회현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관 공공데이터 소재 안내
 - * (예시) 교통체증 문제 → 교통사고 데이터, 가변차로 선정 데이터, 신호 데이터 소재 안내

< 사회 현안해결 공공데이터 지도 서비스(안) >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복잡한 사회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
 - * (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가뭄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③ 공공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

- (데이터 민·관 협치)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치(governance) 기구* 구성 및 운영
 - * 오픈데이터포럼(Open Data Forum : ODF) : 공공데이터 관련 시민사회·기업·학계·언론·정부 및 공공기관 총 5개 분야 당사자로 구성
-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공동생산(Coproduction)
- 데이터 기반 시빅해킹(Civic Hacking)* 활성화 및 데이터 이용자 간 교류 증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및 확대
 - * 국민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와 기술 등을 이용하는 창의적인 활동
- (중앙·지방 데이터 협치)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및 활용 촉진 지원
 -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기술 지원 및 광역 지자체 단위의 데이터 등록·관리체계 수립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에너지 등 도시데이터에 대한 개방 확대 지원으로 '데이터 혁신도시(Data Innovation City)*' 시범 조성
 - * 데이터 혁신도시 :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4.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新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기업)

1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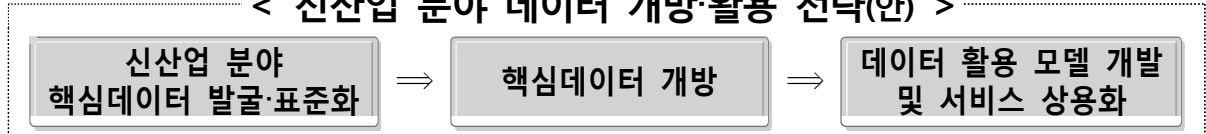
○ (신산업 연관 데이터)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18년)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19년)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대용량 공공데이터 개방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 ('18) 20개 → ('19) 30개 → ('20) 30개 → ('21) 30개 → ('22) 30개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분야 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차원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함께 신산업 분야별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신산업 기술·서비스 상용화 촉진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전략(안) >



2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 (혁신창업 지원체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쏠 단계에 걸친 민·관 혁신창업 종합 지원*

- 창업주·창업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One-Stop 창구 역할 수행

*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기술보증기금·코트라·한국기업데이터·데모데이·한국엔젤투자협회 등 8개 기관 민·관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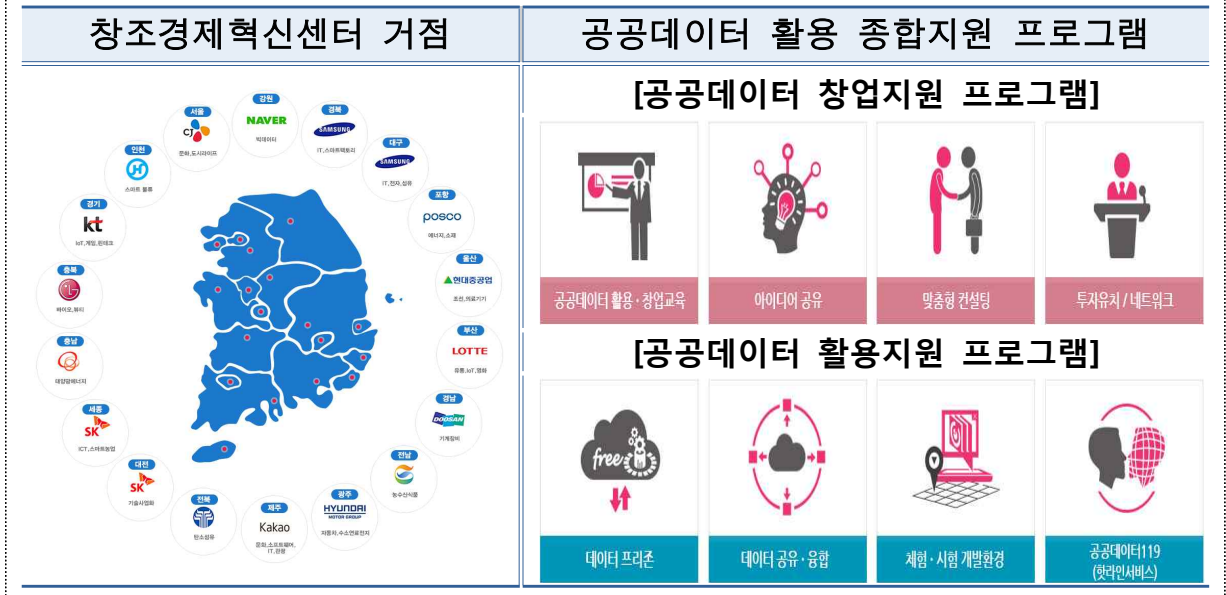
< 단계별 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방안 >

구 분	주요지원
【창업준비】 창업 인큐베이팅	▶ 아이디어 발굴 및 지재권화 지원 ▶ 사업 아이템 개발·마케팅·컨설팅 등 교육 제공
【성 장】 사업화 지원	▶ 창업 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보증, 신용조회·평가 및 산업분석정보 제공
【성 장】 성장 촉진	▶ 온라인 홍보, 영상기반 마케팅, 홍보전략 컨설팅 등 지원 ▶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성 장】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정보 및 컨설팅 제공
【재도전】 재도전 기회 제공	▶ 경영 악화기업·재창업 희망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성실실패자 대상 채무감면 등 재도전 기회 제공

○ (창업 지원 공간) 창업 기업 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D* 확대 조성

* 현재 서울·부산 2개소 운영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에 추가 조성 추진(’18년)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종합지원 정책 추진방안 >



○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 있는 데이터 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

* 데이터 강소 기업 육성 : (’18년) 10개 → (’19년) 15개 → (’20년) 20개 → (’21년) 25개 → (’22년) 30개

3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 (개인정보 보호 조화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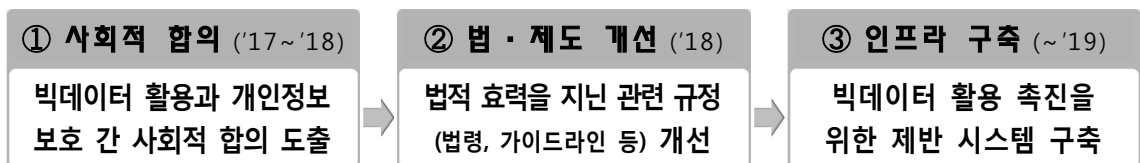
- 시민단체·기업·관련부처(행안부·과기부 등)가 4차산업혁명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 중으로 후속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결과물을 도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간 조화 기반 마련 >

◆ ‘사회적 합의 도출 → 법·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조성



5. 공공데이터 혁신 추진 기반 조성

- ◇ 4개 추진전략·12개 추진과제 실행 전제로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조성
- ◇ 인력·예산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자원 확보 및 역량 집중
→ 기본으로 돌아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총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 정부 5년간 혁신 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법령) 데이터에 기반 한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데이터(증거) 기반 정책 수립 촉진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연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안) 주요내용 >

- (정책기반 마련)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위원회 설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
 - (데이터 등록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데이터 등록,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의무화
 - (기반 구축)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전담 조직·인력(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 설치,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실태 점검·평가
- (조직)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 주요기능 : 1) 국정과제·다부처 정책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과제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 2) 개별기관 단위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상호 연계·협력 지원
 - (시스템) 범정부 오픈데이터 플랫폼 기반 하에 모든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가 연계·관리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범정부 데이터 수집,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속성·특성·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관리된 모든 공공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② 데이터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인력) 공공·민간부분 內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 (공공) 공직분류체계 內 데이터 직류 신설 및 관련 인력 충원
 - (민간) 데이터 초·중·고급 인력 등 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 ※ 대학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 內 데이터 활용 실습과정을 확대 반영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교육) 공공·민간부분 데이터 교육과정 신설 및 역량교육 강화
 - (공공)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및 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강화
 - (민간) 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원 등 기관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쏠 국민 대상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구개발(R&D) 확대 및 예산 통합관리

-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 지원
 - 공공·민간 융합데이터의 발굴·융합·개방·활용 등 민·관 공동 데이터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확대
 - 공공·민간데이터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융합데이터 개방 저해요인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등 민·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 ※ 동종·이종 데이터 연계를 위한 용어·포맷 등 표준 개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기술 정교화
- (예산) 범정부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
 - 중앙부처·지자체 예산 편성 시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구축·개방·활용 등 데이터 생애주기별 지원예산 편성 단계적 확대
 - 공공데이터 발굴·구축·개방,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추진

VI

추진체계

< 기본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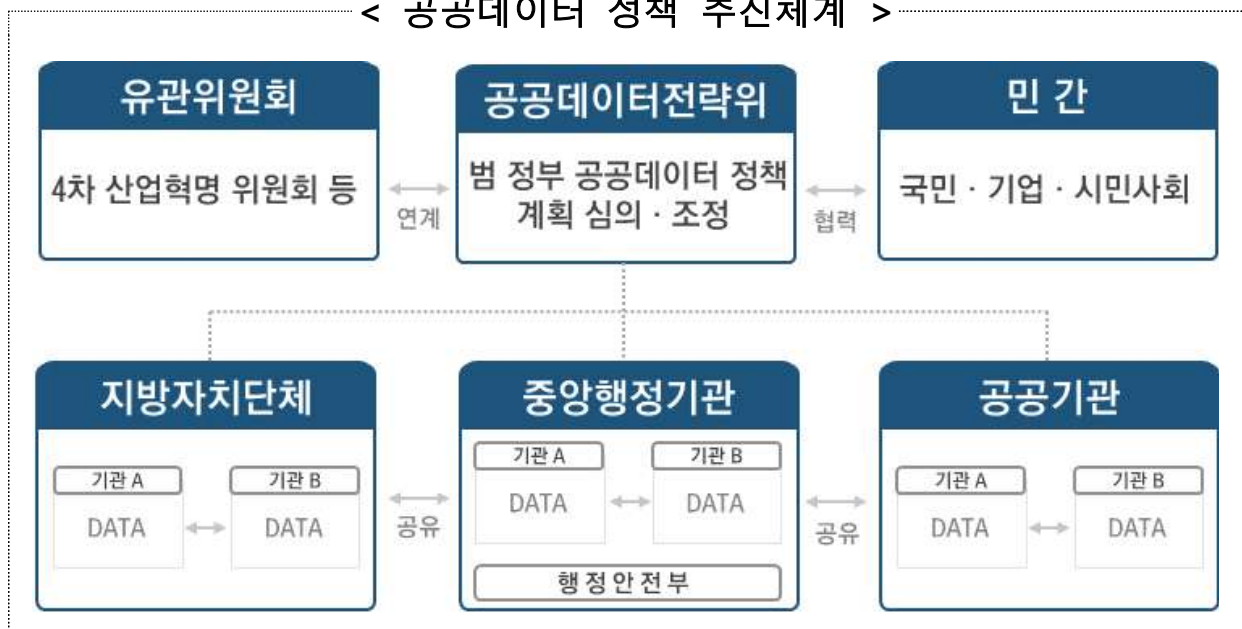
-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4차산업혁명 위원회와 유기적 연계
-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및 기능 강화

- (컨트롤타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모든 기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총괄·조정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2명) : 국무총리·민간위원
 - (기본방향 설정) 모든 기관이 보유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개방목표 제시
 - (정책자원 관리)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데이터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원 배분 검토
 - (분산된 정책 조정)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정책 연계·조정 유도

※ 공공데이터전략위 간사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전략 주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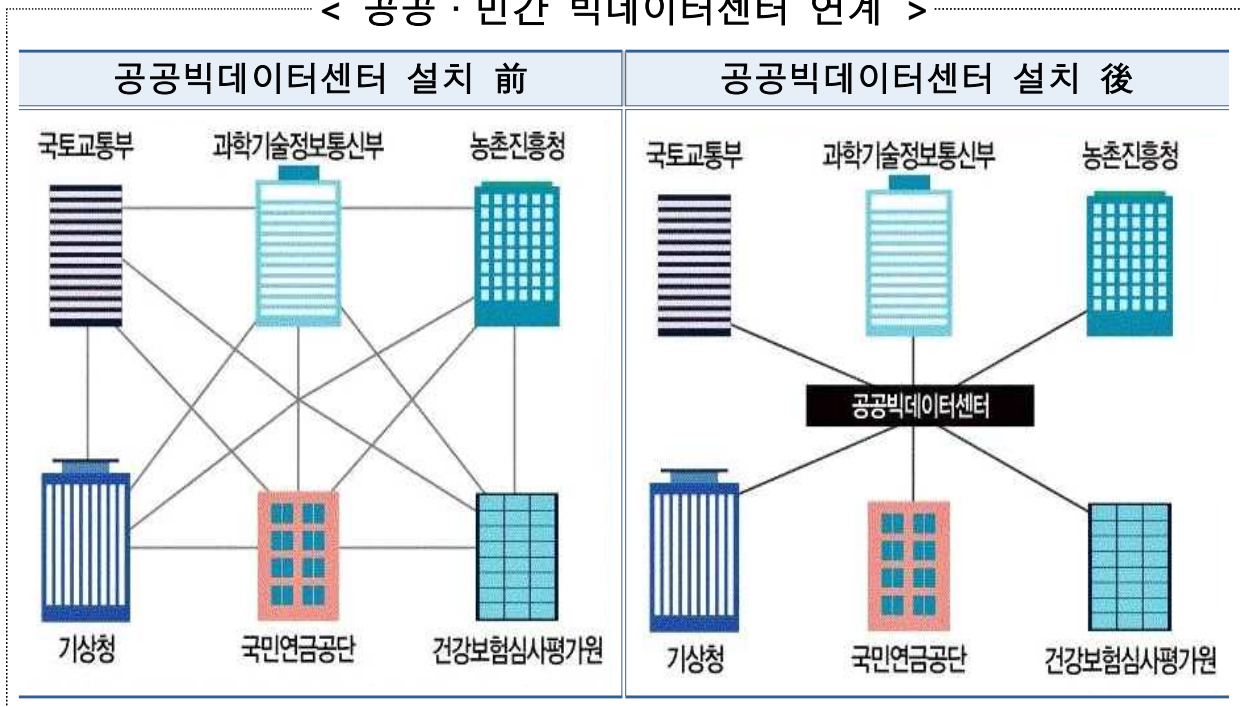
<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



□ 중앙·지방, 공공·민간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공공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 공유, 컨설팅 및 기술 지원,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제공
 - (공공·민간) 공공데이터 민관협치 기구 오픈데이터포럼(Open Data Forum) 운영, 신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 구성
 - 공공데이터정책 공동생산(Corproduction), 데이터 기반 시빅해킹(Civic Hacking) 활성화
 - 데이터 활용기업·벤처기업협회 등과 Hot line 구축, 데이터 개방 요구 등 의견 수렴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데이터 발굴·표준화, 활용 모델 공동 개발
- ※ (예시)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체 : 민간기업·산업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 산재되어 있는 공공·민간의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간 보유 데이터, 분석 및 예측기술, 응용 및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 ※ 공공빅데이터센터('19년 설치 예정)가 공공기관의 분야별 빅데이터센터와 민간기관의 빅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수행

<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 연계 >



VII

기대효과

국민	데이터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가 최대한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률 90% 수준으로 확대 ▶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개방 요구 답변기간 : (기존) 10일 → (개선) 3일
	국민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의료·교통·안전 등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다양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마케터,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등
기업	혁신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신산업 분야 데이터 200개 이상 개방
	데이터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야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데이터 강소기업(가공·분석·유통) 100개 육성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정부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예측의 정확도 제고, 정부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데이터 기반 협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多 부처 관련 현안 대상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 확대

VIII

추진일정

주요 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기관명
	'18년 상	'18년 하	'19년~	
1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재설계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18년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평가 실시	- '19년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평가 실시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국민 삶과 밀접한 주요 데이터 개방 - '18년 국가중점 데이터 구축	- 국민 삶과 밀접한 주요 데이터 개방(계속) - '18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 추가 개방 - '19년 국가중점 데이터 구축·개방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컨설팅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중앙부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지자체·공공기관)	행안부 전부처
2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데이터맵' 구축 	- 국가데이터맵 구축방안 마련	- 국가데이터맵 구축 및 데이터 목록 대국민 공개	- 데이터 목록 대국민 공개(계속)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1번가' 운영 	- 데이터 1번가 본격 운영	- 데이터 1번가 확대 운영(계속)	- 데이터 1번가 확대 운영(계속)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 데이터 프리존 설치 방안 마련 - 데이터 분석도구 개발	- 데이터 프리존 확대 설치 - 데이터 분석도구 지원	- 데이터 프리존 운영 상시화 - 데이터 분석도구 활용 교육 실시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3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용역 진행 - 응급환자 구급차 배치 등 빅데이터 표준모델 확산 대상 선정	- 장애인 지원정보 등 개방 및 활용 - 빅데이터 표준모델 전국 보급 및 확산	- 사회적 가치 데이터 개방 확대 - 빅데이터 표준모델 추가 구축	복지부 고용부 등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현안 선정 -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범 추진	- 사회현안 지도 구축 -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사회현안 지도 운영 -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 	- 오픈데이터포럼 확대 구성 - 데이터 혁신도시 시범대상 선정	- 오픈데이터포럼 활성화 - 데이터 혁신도시 시범조성	- 오픈데이터포럼 활성화 (계속) - 데이터 혁신도시 확대	행안부 국토부 등

주요 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기관명
	'18년 상	'18년 하	'19년~	
4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차·스마트 시티 등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차·스마트 시티 등 데이터 개방 신산업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및 데이터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분야 데이터 추가 발굴 및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창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창업 지원(계속) 및 오픈스퀘어-D 추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중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합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5 공공데이터 혁신 추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행정법 상반기 국회 대응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전수조사를 통한 범정부 데이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행정법 제정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계속)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행정법 시행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범정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연계 데이터 전문가 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직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직류 채용 및 각급기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인사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연구개발 확대 및 예산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연구개발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연구개발 집중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연구개발 집중 투자 확대(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전부처